

사회

양심버린 전문가 집단에 엄벌 내렸다

광주지법, 총인비리 사건 선고심 구형보다 최대 3배 중형

“국민 건강과 직결… 죄질 나빠”

개청 이래 최대 비리사건으로 평가되는 광주시 총인자감시설 입찰비리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체 기소자 28명 가운데 9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으며, 일부 교수와 공무원,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감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받은 피고 인들에게 대해 방어권 보장, 건강 등의 사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9일 오후 총인자감시설 입찰비리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공무원 7명 중 4명에 대

해 징역 1년6월~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총인자감시설 선정 평가심사위원회로 참여했던 전남대 교수 박모(52)씨 등 교수 및 연구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 징역 2년~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4년를 선고했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수나 공직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부의 강한 단죄 의지가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남대 박모 교수, 동신대 박모 교수, 광주시 김모 서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찰 구형량(1년~1년6월)보다 최대 3배 높은 2~3년을 선고했

피고인 이름	소재 및 직책	1심 선고 형량
■ 광주원심사위원회		
변○○	광주시 서기관	징역 1년6월 벌금 1000만원
김○○	광주시 서기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	광주시 서기관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고○○	광주시 사무관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벌금 2000만원
이○○	광주시 서기관	징역 2년6월 벌금 2500만원
유○○	광주시 서기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박○○	광주시 사무관	징역 8월 집유 2년 벌금 500만원
■ 교수 및 연구원(심사위원회)		
박○○	전남대 교수	징역 2년6월 벌금 2500만원
이○○	목포대 교수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4000만원
박○○	동신대 교수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강○○	조선대 교수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박○○	전남대 교수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정○○	광주원심사위원회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1000만원

■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		
윤○○	대림 상무	징역 2년
장○○	대림 직원	징역 8월 집유 2년
김○○	대림 직원	징역 1년 집유 2년
이○○	대림 직원	징역 8월 집유 2년
임○○	대림 직원	징역 8월 집유 2년
김○○	금호 상무	징역 1년6월
임○○	금호 직원	징역 4월 집유 1년
조○○	금호 직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김○○	금호 직원	징역 2년 집유 3년
최○○	금호 직원	징역 1년 집유 2년
나○○	전 금호 직원	징역 10월 집유 2년
김○○	전 금호 상무	징역 4월 집유 1년
서○○	코오롱 상무	징역 2년
정○○	코오롱 직원	징역 4월 집유 1년
김○○	남해 전무	징역 1년 집유 2년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나 대학교수 등 사건 범죄의 주된 부분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총인자감시설 설치공사와 관

련해 부정한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사위원회인 공무원과 대학교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상무 윤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건설업체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3명에게 징역 1년6월~2년 실형을, 나머지 12명은 형 집행이 1~3년 유예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질산 누출 대비 훈련

29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오비맥주공장에서 질산 누출 사고를 가상해 열린 ‘화학 사고 대비 훈련’에서 북부소방서 대원들이 누출된 질산을 석회로 가라앉힌 다음 미세물분무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 흥기 휘둘러

광주광산경찰, 40대 체포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위층의 소음을 향의하다가 이웃을 흥기로 치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9일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에 흥기를 휘두른 김모

(4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33)씨를 흥기로 한차례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김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근무를 벌인 이후 사내가 잠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웃에 흥기로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치고 귀가한 A씨가 발걸음 소리 등으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날에도 김씨와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직장에서 3교대 근무를 했던 뒷 애니언이나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사내가 잠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검은 29일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46)씨를 특기법 위반(국고손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인이 사채를 빌린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다 관련 계좌만도 160여 개에 달해 공금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높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순천지검은 29일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46)씨를 특기법 위반(국고손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

사 등을 의혹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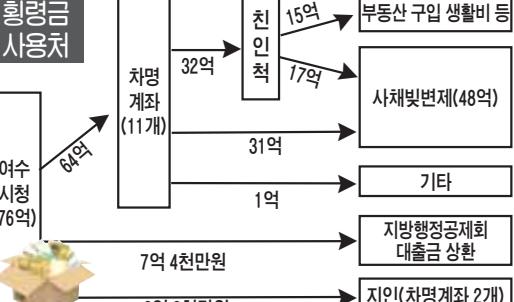
또 자신의 내연녀에게 3억9000만 원을 주는 등 사실상 자기 돈인 것처럼 탐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했다.

검찰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3년 동안 아내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금여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40억4700여 만원, 여수상품권 가상기맹점을 만들어 상품권 회수 대금 28억8700여 만원, 직원들의 소득 세·주민세 등을 부풀려 그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6억6600여 만원 등 모두 76억20여 만원을 챙겼다.

이 가운데 63% 이상인 48억원은 아내의 사채 빚을 갚는데, 15억원은 자신과 친인척의 아파트 등 부동산과 차량 구입 등에 7억4000만원은 자신과의 대출금을 갚는데 썼다.

또 자신의 내연녀에게 3억9000만 원을 주는 등 사실상 자기 돈인 것처럼 탐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군산경찰서 소속 오승우 경감은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조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일한 민족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최근 3년간 초과수당수당 미지급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까지 합하면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구액을 일단 1인당 100만원으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

훔친 차 타고 수천만원 날치기

○…목포경찰은 29일 부녀자들의 핸드백을 상습적으로 날치기한 김모(23)씨, 김씨의 후배(22)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A(여·30)씨의 명품가방(100만원 상당)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차량 4대를 훔친 것을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수사를 피해하기 위해 훔친 차량을 이용해 진도, 강진,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을 돌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76억중 48억 아내 사채 빚 탕감

15억 부동산·차량 구입… 4억은 내연녀 줘

檢, 여수 8급 공무원 기소

사상 최악의 공무원 횡령 사건으로 기록될 여수시 8급 공무원의 76억원 횡령은 결국 부인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이 가로챈 공금의 대부분을 당진하고 본인 및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규모도 적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수시민들이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인이 사채를 빌린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다 관련 계좌만도 160여 개에 달해 공금 일부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높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63% 이상인 48억원은 아내의 사채 빚을 갚는데, 15억원은 자신과 친인척의 아파트 등 부동산과 차량 구입 등에 7억4000만원은 자신과의 대출금을 갚는데 썼다.

또 자신의 내연녀에게 3억9000만 원을 주는 등 사실상 자기 돈인 것처럼 탐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횡령 과정에서 여수시 회계과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정관리시스템 e-호조 대신 수기로 회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점, 지출결의서 금액을 과다집행하거나 다른 도장을 찍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결재된 점 등 여수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